

## 진보의제를 ‘노동 민주화’로 이동하자.

2012.02.16 |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 bkkim21kr@naver.com

### 목차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노동시장에서 ‘잔혹한 독재’
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
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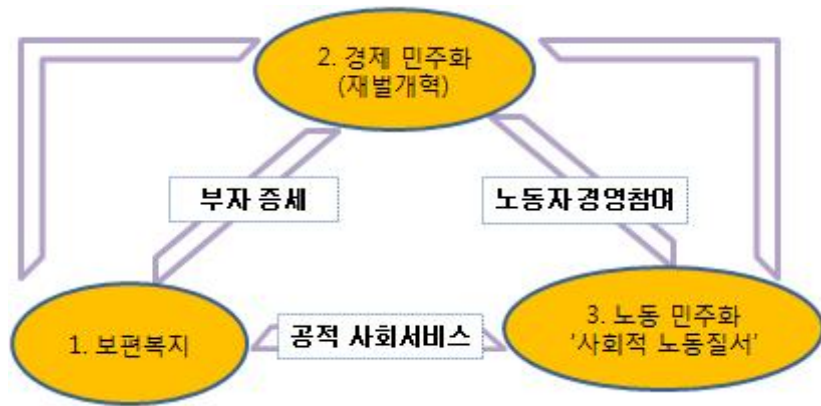
새사연은 2006년에 설립된 진보적 민간 연구소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으며,  
회원들의 후원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갑작스런 '좌 클릭' 아닌 오랜 '우 클릭'에 놀라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양대 선거 앞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보편 복지담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은 물론 부자 증세도 상당히 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외부적으로 2011년 재발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1%탐욕에 저항하는 월가 시위의 세계적 파장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록 강도와 초점은 다르지만 보수적인 새누리당조차 경제민주화를 정당의 맨 앞자리에 놓는 등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역시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이다.

이 뿐인가. 외환위기 이후 15년 동안 노동계가 실로 눈물겹게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비정규직 차별 철폐나 노동시간 단축, 해고요건 강화를 포함하여 심지어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올려주기 위한 노동법 개정까지 정치권에서 터놓고 주장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과연 정치권의 '급격한 좌 클릭'이라고 할 만하다. 과연 조선일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과거 민주노동당 공약을 베끼기하고 있다고 통탄할 만큼 정말 보수적 정당들이 적어도 정책 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에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

[그림 1] 2012년 선거를 앞둔 의제 변화구도



물론 정치권에서 상당정도 보편복지에 대한 수용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올해 들어서면서 복지 담론에서 큰 쟁점은 끝났다고 생각했던지 의제의 주 무대가 경제 민주화로 이동했고 재벌개혁 논쟁이 불붙고 있는 중이다. 민주통합당은 '보편 복지 - 경제 민주화 - 부자증세'를 핵심 정책 공약구도로 잡고 있다. 심

지어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새누리당까지 과거에 비하면 대단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게 진보 의제구도는 보편복지에서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고 2012년 현재 이것이 노동 민주화로 더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의 기로에서 있는 시점이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문제를 한 발만 떨어져서 보면 지금 상황이 ‘너무 빠른 좌 클릭’을 운운할 상황인지 심각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너무 많다. 과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화를 요구하는 수준의 경제 민주화가 언제의 얘기인가. 대표적인 독재정권이라고 할 전두환 정부가 만든 것이다.<sup>1)</sup> 전례가 없던 획기적인 개혁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리하고 요건 강화나 비정규직 임금격차 완화 등도 마찬가지다. 외환위기 이전에 노동운동이 대체로 확보하던 것들이다.

그 만큼 1997년 환란이후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나 노동 민주화가 심각한 후퇴를 거듭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진보가 그 동안 매우 소극적이고 혁신성과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최근 진보 담론의 확산을 보고 ‘좌 클릭’이라고 깜짝 놀라서 당황할 정도 수준으로 우리 사회의 진보가 혁신 구상을 갈고닦지 못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보수가 이끌어온 담론 구조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가 버린 것은 아닐까. 결국 지금 보수의 ‘갑작스런 좌 클릭’에 놀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보가 ‘오랫동안 우 클릭’ 해온 것에 새삼스레 놀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확실한 것은 민주정부 10년, 그리고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신자유주의와 그 필연적 산물인 양극화로 인한 국민의 누적된 고통이 점점 더 인내력의 한계에 가까워 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 동안의 반동의 역사를 바꿀 잠재력으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시작되어 잠깐의 회복을 제외하고는 점점 더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위기는 자본주의와 현재 경제 모델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민심의 아래에서부터 진보를 향한 기대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고, 단지 그 초기

1)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1986년 전두환 정부시절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삽입된 것이다.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는 1979년 도입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병천 교수는 전두환 정부의 재벌정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민주노총,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민화” 자료집. 2012

적 형태가 복지 담론의 빠른 확산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복지담론 확산은 시작일 뿐, 점점 더 경제민주화, 노동 민주화, 자본 통제로까지 진보에 근거해 사회운영과 사회모델을 다시 찾아보려는 열망들이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진보운동과 진보 정책들이 여기에 준비되어 있지 못할 뿐인 것이다. '지금의' 좌 클릭을 대단하게 생각하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우 클릭을 반성하면서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자.

## 2.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 노동시장에서의 잔혹한 독재

신자유주의를 '금융규제 완화' -> '경제의 금융화' -> '금융의 세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이 돈을 버는 모든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급부의 대가가 있었다. “사람이 노동하는 환경을 사상 최악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를 구가했던 자본주의 황금기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1970년대까지 기능했던 노동을 보호하는 사회적 협약=계급적 타협구조를 붕괴시켰다. 기존의 사회적 타협은 “노동을 관리하고 분배할 권한을 자본가들에게” 넘기는 대신 “자본가들은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고, 경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포괄적인 사회복지 계획으로 돌려지는 것을 수용해야”한다는 것이었다.<sup>2)</sup>

노동과 자본사이의 사회적 협약의 결과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운동의 단체 협약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보호와 유급 휴가, 고용규제에 관한 법들이 강화되고 종업원들의 보호와 안전을 크게 높였다. 그 결과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사회적 안전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권의 보호와 노동 환경에서의 민주적 틀의 확립에 기초하여 임금과 소득이 체계적으로 상승하고 격차는 줄어들었다. 자본주의 황금기는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자의 안정적 구매력으로 가능했다.

2) 아스비에른 발, 2012,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앞으로 논의 전개는 아스비에른 발의 주장을 참조하면서 이어갈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각주가 없는 한 인용문은 이 책에서 따 온 것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규제완화와 개방화, 자유화라는 이름아래 국가와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과 함께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을 하고 노동법과 단체협약을 무력화시켜 나갔다.<sup>3)</sup> 그것이 우리에게 질리도록 익숙한 노동 유연화, 또는 유럽에서의 유연 안정화<sup>4)</sup>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노동 유연화라는 이름아래 진행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노동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 첨단기술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다. IT 업종이면 몰라도 청소 용역이나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가 첨단기술에 대한 적응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또한 ‘신자유주의 노동 환경’이 만들어 낸 유연화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안전성을 담보하자고 해서 쉽게 해소될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sup>5)</sup>

결국 노동 유연화의 진실은 노동의 잔혹화였고 노동의 야만화였다는 것이 아스비에른 발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노동시장은 근로자들의 경험과 자격과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외부 컨설턴트들에 의한 구조조정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아웃소싱과 역외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유연성 강화가 작업장에서 개별 직원과 노동조합의 권력을 동시에 약화시켰다.

“(노동 시장에서의 규제 철폐는)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작업 조건과 노동시장이 더욱 거칠고 잔혹해졌다.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과 구조조정, 노동 강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불안정성이 지금 일의 잔혹화와 노동의 배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근대 복지국가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3) 아스비에른 발은 신자유주의가, 그 시원 국가였던 미국에서 1981년 항공관제사 1만 1천명 파업 진압과 해고로, 그리고 영국에서 1984년 광부 파업 1만 명 해고로 본격화되었던 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앞의 책 122~123쪽

4) 덴마크가 성공한 예로 꼽힌다. 문제는 덴마크와 유럽 연합의 나머지 국가들에서 똑 같이 유연성이 커지는 반면 사회적 안전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운동 안에서는 유연안정성을 현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조합 안에서는 이 용어보다 ‘유연화 착취(flexploitation)’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이는데 이것이 현실을 더 정확히 묘사하는 것 같다. 아스비에른 발의 앞의 책

5) 노동연구원은 은수미 박사는 노동시장이 중심과 주변으로 분절되고 이중화되고 있는 현상은 최근 유럽에서도 공인되는 분위기라고 확인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노동법과 단체 협약이 일상의 작업장에서 종종 훼손되고 무시되며, 작업장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노동시장은 매우 분명하게 양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변으로 밀려난 집단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현재 한국과 자본주의 국가 노동시장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청년 유니온이 최근까지 다뤘은 청년 노동실태들, 죽음을 무릅쓴 30분 피자배달 아르바이트생들, 주휴수당도 못 받는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최근에 조사한 평균 월수입 69만으로 살아가는 청년 뮤지션들은 사실상 아무런 노동권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무법화된 현재의 노동시장의 단면이자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절대 극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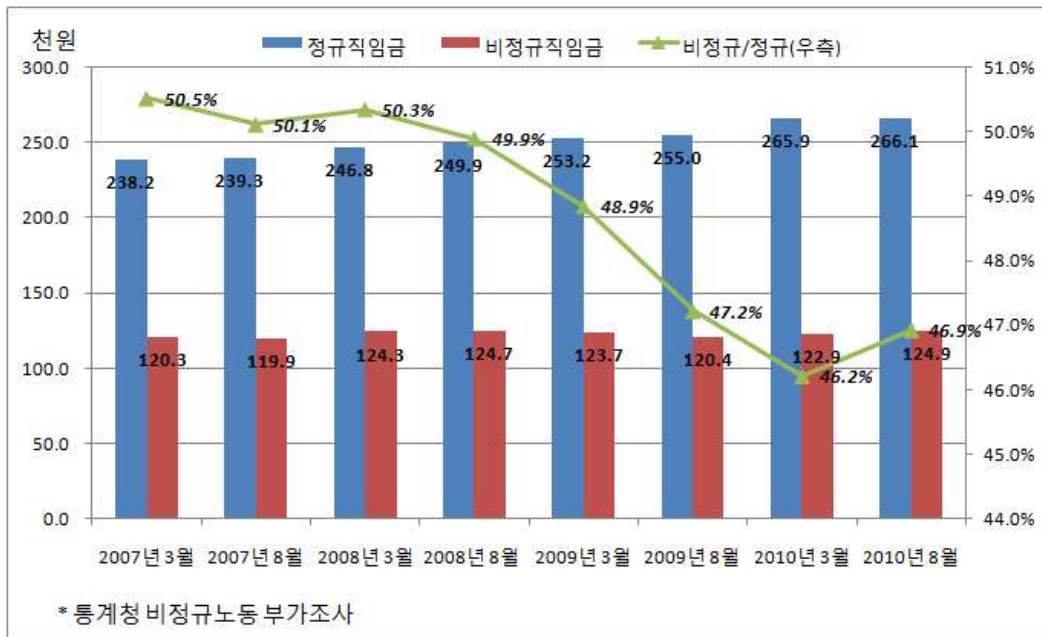
어쩌면 현재 노동시장에서 2400만 취업자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노동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공기업과 대기업 일자리 약 200만개가 오히려 특수한 예외지대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0만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2,200만개의 일자리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제대로 된 노동환경과 노동권,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민영화 된 공기업인 KT는 2000년대 이후 2003년 5천 명, 2009년 6000명에 이르는 인원을 긴급한 사유 없이 구조 조정했다. 일상화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서 예외지대는 없다.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도 44.6%에 이른다. 공공부문의 아웃소싱과 외주화는 민간보다 심하다.

▶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정규직이라도 중소기업 정규직은 훨씬 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있다. 여기에서 다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을 비교하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MB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0%미만으로 줄었다.(그림 2 참조)

▶ 비정규직의 경우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직장에서 제공 받는 비율은 대체로 30%대에 머물고 있다. 3분의 2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소득도 낮고 사회 안전망도 없이 살아가는 워킹푸어(Working Poor)라는 신조어가 생겨난 것은 물론 2010년 1분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체 가구의 7.7%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기준이 평균임금의 32%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

[그림2]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비교



▶ 은수미 박사의 면접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공식적으로는 ‘무직’에 해당하는 방식의 현금 급여로 생활하고 있고, 입점한 백화점에서 일하는 노동자, 학원 강사, 보험 판매사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가사 간병인들 모두가 ‘노동자’라는 대접도 받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 ‘자영업자’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노동행태들이 난무한 결과,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가 예외지대로 밀려나고 그 나머지 주변부적 일자리들이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사실상 표준이 되었다. “1990년대 말에 이미 GM, AT&T, IBM이 미국에서 직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이 아

니었다. 대신에 직업 소개 회사인 맨파워가 가장 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회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sup>6)</sup>

[그림3] 한국 맨파워 코리아가 소개한 사업 영역 웹사이트



이것이 노동 유연화라는 그윽한 이름아래 만들어졌던 ‘신자유주의 노동환경’의 진정한 실체다. 신자유주의의 전형적인 규제 완화는 금융시장이나 기업 활동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파괴적으로 관철되었다. 해고 규제완화,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노동보호법의 규제 완화, 직업 알선 소개, 파견에 대한 규제완화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노동권까지 무너져가는 온갖 규제완화로 인해 중심이 주변이 되고 주변이 중심이 되는 현재의 노동시장을 초래했던 것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더 이상 그윽한 ‘노동 유연화’라고 부르지 말자.

### 3. 자본주의 위기의 활로는 노동시장에 달렸다.

회복될 것 같았던 세계경제위기가 다시 장기화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유럽 위기 전개양상에 따라서는 또 한 번의 극심한 혼란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위기가 장기화하고 좀처럼 회복 동력을 찾지 못하자 단순한 금융규제를 넘어서

6) 맨파워 웹사이트는 자신이 전 세계에 270만 명을 고용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공표하고 있다.



실업과 고용 소득문제를 천착해야 하고, 그 안에 누적되어온 소득 불평등 문제에서 뿌리를 찾아 이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정적 경제회복은 없다는 강력한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을 중심으로 씨티그룹이나 AIG같이 파산지경까지 이른 은행들의 부실이 일정하게 청산되었고, GM을 비롯한 제조업의 수익률이 상당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상태와 낮은 소득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쉽게 소득 불평등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낸 노동시장의 심각한 파괴와 황폐화의 결과가 상당히 엄중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의 재분배를 낳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빈자에서 부자로 재분배가 이뤄졌다. 사회 엘리트들에게로 부가 집중되면서 민간의 빈곤뿐만 아니라 공공의 빈곤도 크게 악화되었다. 달리 표현하면 복지국가의 발전을 상징했던 부의 재분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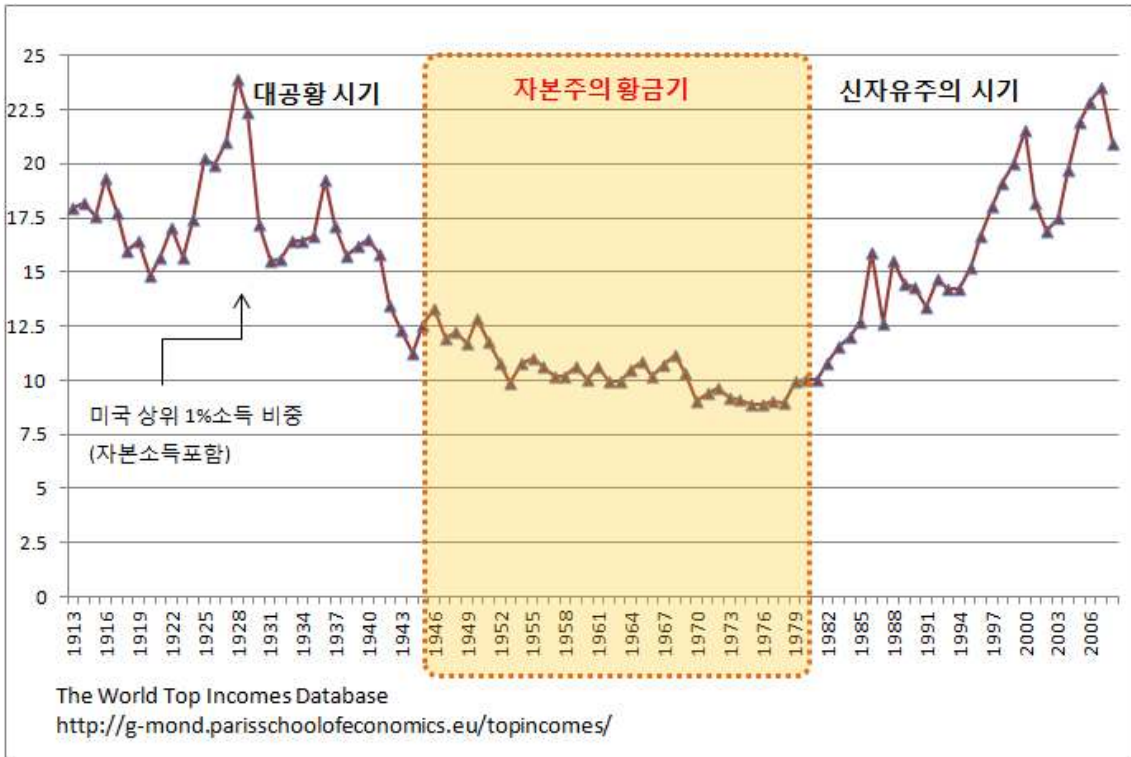
이것이 바로 1%의 탐욕에 저항하는 99%의 저항운동인 월가 점령운동이 전 세계의 호응을 얻게 되었던 배경이면서 동시에 세계경제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권과 노동안정을 지켜주던 각종 규제와 질서들이 파괴되고 되고 그 결과 각종 형태의 저임금이 지속되면서 소득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반대로 사회의 1%로 부가 집중된 것이다. 99%에서 1%로 부의 역 재분배를 심화시킨 구조는 바로 ‘신자유주의 노동 환경’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한국사회에서도 자본 측에는 소득과 저축이 쌓여 갔지만, 노동 측에는 소득도 저축도 쌓이지 않았다. 대신에 착실히 쌓여간 것은 부채였다. 부채로 소비하는 동안에는 낮은 소득도 감춰져 있었다. 부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잔혹한 노동시장의 실체’ 역시 사회의 중심 문제로 등장하지 못했다. 노동시장이 착실히 폐해지는 반대편에서 자본시장이 착실히 비만으로 살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이 모든 것을 감추어 주었다. 마침내 부채가 임계점에서 폭발하고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국가와 기업, 국가와 국가의 모든 관계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성격이 전면에서 부상하면서 감춰졌던 실체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위기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수준의 소득불평등 개혁 없이, 그리고 소득 불평의 근원인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 자본주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이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90년대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다.

[그림 4] 미국 상위 1%의 비중의 역사적 변화 추이



라이시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상위 1%로 소득이 집중되었을 때 발생했으며, 반대로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과 성장은 소득 격차가 낮아졌을 때 실현되었음을 강조한다.<sup>7)</sup> 그런데 총 소득 중 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이 1928년과 2007년 둘 다에서 23퍼센트를 넘으면서 최고치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필연적이었던 셈이다.(그림4 참조)

7) 로버트 라이시, 2010,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42~53쪽

그러나 불행하게도 1929년 대공황의 경험을 절반 정도 밖에 배우지 못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십중팔구 제 2의 대공황이 될 뻔 한 상황이었지만, 대공황의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고 엄청난 구제 금융과 경기부양책을 쏟아 부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라이시는 “(구제 금융과 경기부양책으로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방지했기 때문에, 더 큰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감과 시급성이 약화되고 말았다”고 개탄한다.<sup>8)</sup> 절박한 더 큰 난제는 바로 ‘불평등의 심화’였다는 것이다. 난제의 해결을 미룬 대가는 잠깐의 경제 회복 뒤에 다시 찾아온 위기였고 그 위기는 지금 장기화 추세로 가고 있는 중이다.

#### 4. ‘노동 민주화’가 왜 사회개혁의 중심인가.

그러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에 가한 충격은 단지 몇 가지 노동시장 정책 변화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파괴한 것은 민주주의였다. 신자유주의가 민영화라는 이름아래 공공부문을 사적인 시장영역으로 끌어들이었을 때다.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아래 노동과 자본사이의 사회적 협약과 규율을 노동시장 자유화로 바꾸었을 때다. 그 때에 민주주의는 차례로 시장으로 대체된 것이다.

민주주의적 통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 부문의 많은 공익적 서비스 들이 사적 자본의 이윤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으로 들어왔다. 노사간 오랜 협의와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할 노동 규칙들이 규제 없는 노동시장에 맡겨졌다. 시장에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없으며 어떤 선거의 영향을 받는 주체나 행위자도 없다. 이제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안들이 국민들에게 선거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주가로 평가 받는 시스템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결정권이 점점 시장의 행위자들에게로, 재정적으로 막강한 개인들과 조직들과 관료들에게로 넘어가고 있다.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고 있다.”<sup>9)</sup>

8) 로버트 라이시 앞의 책

결국 신자유주의가 규제완화와 민영화라는 이름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통제,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다.

“(시장에 대해) 규제를 한다는 것은 곧 자본과 시장의 힘들의 영향력에 제한을 둠과 동시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주체와 근로자들과 그 조직에 권력을 부여할 법률과 규율을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반대는 무엇인가. “민주적 영향력과 사회적 안전,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도구를 폐지하게 되는 것이다. 결정권이 정치체제로부터 시장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무엇인가. 노동개혁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문제도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돈이 돈을 버는 환경을 엄격히 규제”하고 대신에 “사람이 노동하는 환경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도와 규율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에서 지금 시대의 개혁은 자본시장을 엄격히 다운 사이징(down sizing) 하고 노동시장을 업 사이징(up sizing)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에 이어 노동개혁 방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 새누리당과 통합 민주당이 조금씩 노동개혁안을 내놓기 시작했고 통합진보당은 2월 12일 ‘5대 노동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사회연구소에서도 ‘9대 노동공약’안을 제시했다. 속속 추가적인 노동개혁 대책이 줄을 이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개혁안들이 단순한 노동시장 정책 수단을 넘어서 민주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노동 민주화의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경제 민주화란 “민주주의가 시장에 우선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여전히 시장질서가 중심이고 경제 민주주의가 보조라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다. 그러면 노동 민주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적 자본의 재산권과 이윤 추구의 자유를 인정하되, “자본의 이윤추구 권리보다 국민이 일을 할 권리가 우선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업도 최종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주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를 쳐다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9) 2005년 노르웨이 적록 정부 정강 중에서. 아스베이른 발의 앞의 책

그런 점에서 볼 때, 특히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정치적 여건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1930년대 뉴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도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준 것이고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가 작동했던 것도 노동자의 협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50~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일반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높여주었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성실한 태도로 노조와의 협상에 임해야 했다. 1950년대 중반 무렵에는 미국 전체 근로자들의 약 3분의 1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sup>10)</sup>

그런 점에서 민주당 경제 민주화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조항을 없애거나 보완해서 실업자 및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와 관련 단체에게 단결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이나, 통합진보당에서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 20%, 단체협상 적용률 5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의미가 있다. 또한 노동사회연구소에서도 “중앙 - 산업 및 지역 - 기업차원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제도”개선을 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미 논의가 붙은 경제 민주화를 더 확장하여 노동 민주화로,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 경영참여까지 갈 수 있는 전진적인 사회개혁 틀을 짜보자. 지금은 그런 시기다. 정치권이 의외로 ‘좌 클릭’하고 있다고 대견해 할 시기가 아니다. 🇰🇷

[참고 1] 민주당 경제 민주화 특위의 12대 경제 민주화 정책<sup>11)</sup>

- 1) 기회균등 선발제도
- 2) 재벌 범죄 근절
- 3) 재벌 기업 계열사 출자 규제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 4)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 5) 중소기업 보호
- 6)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 7) 정리해고 제도의 개혁

10) 로버트 라이시 앞의 책 80쪽

- 8)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높이기
- 9) 금산분리의 강화
- 10) 금융감독 개혁
- 11) 종업원대표의 이사 추천권 도입
- 12)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로 부자증세

- [참고 2] 통합 진보당의 5대 노동공약<sup>12)</sup>
- 1) 2017년까지 노동조합 조직률 20%, 단체협상 적용률 50%로 확대
  - 2)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제 도입 등 비정규직 25% 감축
  - 3) 평균임금의 50%로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최저임금 현실화
  - 4)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 산업 주 5일제 등 실 노동시간 단축
  - 5)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노동법원 설치

- [참고 3] 김유선 소장의 9대 노동개혁 정책<sup>13)</sup>
- 1) 실 노동시간 단축
  - 2)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용조건 개선
  - 3)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청년고용할당제
  - 4) 비정규직법 - 간접고용 문제해결에 집중
  - 5)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
  - 6) 법정 최저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엄정한 법집행. - 최저임금 수준을 50%로. 명예근로 감독관 제도. 최저임금법 위반 과태료 부과
  - 7)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8) 노동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 9)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11) 유종일 민주당 경제특위위원장, 『경제 119』, 2011  
 12) 2012.2.12일 보도자료  
 13) 노동사회 2012년 1,2월호